

**안전사회 정착을 위한  
세계 각국의 위기관리 체계**

**안전사회 정착을 위한  
세계 각국의 위기관리 체계**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경찰연구원 김 용 민**

# 목 차

## 요약본

I .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	1
2. 선행연구의 검토 .....	2
II . 선진 국가 위기관리 체계 .....	4
1. 미국 .....	13
2. 영국 .....	15
3. 일본 .....	18
III . 주변 국가 위기관리 체계 .....	24
1. 러시아 .....	24
2. 중국 .....	28
IV . 특수상황 국가 위기관리 체계 .....	30
1. 이스라엘 .....	30
2. 대만 .....	32
V . 외국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비교 .....	35
1. 종합적 평가 .....	35
2. 국가별 비교 .....	37

VI. 정책제언 .....39

참고문헌 .....42

## <그림 차례>

<그림 1> 미국의 국토안보부 조직 .....8

<그림 2> FEMA 조직 .....10

<그림 3> 내각 관방 정보안전센터 조직 체계 .....20

<그림 4> 일본의 방재조직 개념도 .....21

## 요약본

첫째, 오늘날 세계 각국은 능동적으로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산형에서 통합형 위기관리체계(사례:美國-NSC,DHS,FEMA)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위기대응의 경우 과거 사후 대응 방식에서 사전 예방 중심을 변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통합형 위기관리체계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을 지휘 통제 하는 방안 보다는 각 기관의 기능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협조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스라엘과 대만처럼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애국심과 충성심, 위기관리에 교육과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며, 민·군의 위기대응 체계가 명확하며 일관성을 발휘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셋째, 영국과 일본의 대국민 전파시스템도 시사점이 크다. 신속한 위기전파만이 이미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국민과 함께 한다는 자세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위기사태를 직접 홍보하고 함께 대처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넷째, 오늘날 다양한 위기상황은 시민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간 긴밀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기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공무원과 시민사회는 협력의 파트너라는 인식이 중요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간 상호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연락 채널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선진국의 경우 매뉴얼의 완성도 및 단계별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다. 특히 과거의 사례로부터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여 대형 참사가 재발하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실패 사례를 포함한 위기관리 관련 지식을 매뉴얼에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업그레이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별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는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위기관리 형태로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매뉴얼이 형식적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난 수십년간 발생한 각종 대형 사건 사고들을 종합하여 만든 예상 시나리오를 토대로 여러 해당 정부기관들과 민간 참여자들 간의 시뮬레이션 훈련이나 Role-Playing 등의 사건 대응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영국의 충실한 사후 복구 시스템을 통한 국가 신뢰로 제도도 배울 점이 많다. 런던 테러(2005년 7월) 사고시 ①사후 수습과 관련해 해당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따라 사후 복구가 진행되었으며, ②피해자 사무국을 조기에 설치하는 등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③사고 유가족 지원 담당 장관을 지정할 정도로 피해자 관리에 철저히 하는 등 피해자 측과 국가간의 신뢰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획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의 몇몇 실패 사례로 인해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며, 나아가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위기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획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과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 위기관리 방식들은 각양 각색으로 정형화된 모범 답안은 없으며, 각 국가가 자신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 I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 가. 연구의 필요성

국민들의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 (safety need)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국민들의 안전욕구의 미충족은 한국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 신뢰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sup>1)</sup>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이는 자연환경의 변화,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 기술적 환경의 변화, 정치적 환경의 변화, 국제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재난의 복합화 현상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sup>2)</sup>

각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 안전사회 정착을 위한 위기관리 방식들은 각양 각색으로, 위기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 일반화되고 정형화된 모범 답안은 없으며, 각 국가가 자신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체계를 개발해야 하므로, 많은 국가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①선진 국가(미국, 일본, 영국), ②주변 국가(중국, 러시아), ③특

---

1) 정지범, 국가종합위기관리론, 법문사, 2009, 137면.

2) 위의 책, 3면

이상황 국가(이스라엘, 대만) 등 3개 국가군으로 분류하여, 이들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안전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나. 연구의 범위

국가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선행연구인 ①바람직한 국가위기 관리체계(국가안보전략연구소), ②국가종합위기관리론(한국행정연구원) 등 국가위기관리체계와 관련된 단행본 및 관련 논문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세계 각국의 국가위기관리 체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 가. 바람직한 국가위기 관리체계(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전통적으로 국가위기는 주로 외부 세력에 의한 무력적 위협 측면에서 논의되고, 국가안보라는 개념으로 상징화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국가의 임무와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위기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전통적인 안보위협 이외의 새로운 위협, 위기에 대한 관리 대응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즉 테러, 각종 재해 재난으로 인한 대량 파괴로 인한 손실이 국지전 혹은 전쟁 이상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제 환경의 변화 및 자신이 처한 특수한 입장에서 대내외적으로 국가 위기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추세이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국토안보부(DHS)를 신설하였고, 스웨덴도 비상관리처(SEMA)를 신설하여 국가위기관리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제정했고, 기본지침에 입각하여 33개의 표준 매뉴얼과 280여개의 실무 매뉴얼을 구성<sup>3)</sup>한 바 있고, 3,300여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다.

### 나. 국가종합위기관리론(한국행정연구원)

본 연구는 기존의 위기관리를 바라보는 단편적인 시각(학제적 접근)을 뛰어넘어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했으며, 미국, 일본, 유럽 각국 및 국제기구의 위기관리 실태를 연구하였고, 이를 보다 구체적인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향후 위기관리는 전통적인 재난 영역을 뛰어넘는 보다 포괄적인 영역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연재난, 인적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의 정위를 뛰어넘어 미래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sup>4)</sup>고 제안하고 있다.

---

3)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바람직한 국가위기관리체계, 2009, 3-4면.

4) 정지범, 앞의 책, 머리말

## II. 선진국가 위기관리 체계

### 1. 미국

#### 가. 위기관리의 배경

미국은 세계 전략을 구사하는 국가로서 범글로벌 이슈 및 지역분쟁, 동맹관계, 불량국가 그리고 포괄적 안보 부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의 위기를 관리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여러 국제 분쟁에 관여해 온 만큼 자연적·사회적 위험 요인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적대시 하는 국가들에 의해 발생하는 테러 등 정치적 위험 요소들도 존재하고 있다.<sup>5)</sup>

기존의 전통적 안보위협 및 국내 기반체제를 목표로 하는 테러와 이것에 의한 인위재난, 그리고 산불과 허리케인 피해 등의 자연재난 등 전 부문에 걸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자체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환경적 조건과 ‘연방국가’라는 특성을 고려한 대응체제를 모색하여 왔다.<sup>6)</sup>

특히 여러 유형의 국가적 위협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9·11 테러 이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목표로 관리체제를 개선·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아메리칸 인디안, 비정부기관들 간의 표준화

5) 정지범, 앞의 책, 307면.

6)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27면.

된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3년 국토안보부(DHS)를 신설하였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위협을 총괄·관리하는 국토안보부는 과거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위기관리 관련 기능을 통합<sup>7)</sup>·조정하여 국가 위기상황에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정부기관이다. 국토안보부는 위기상황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연방정부는 대규모 위기상황발생시 지방정부의 지원요청에 따라 가용한 자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sup>8)</sup>

미국의 위기관리 체계는 재난 영역별로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전통적 안보위기관리 체계, ②국내적 안보위기관리체계, ③재난관리체계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①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담당하며, ②의 경우는 국토안보부(DHS)가 담당하고, ③의 경우는 연방비상사태관리청(FEMA)이 담당하고 있다.

즉, 위기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각각 주무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NSC는 대외정책이 반영된 가운데 전통적인 안보위협을 담당하고, DHS는 주로 미 본토의 국가위기대처에 주안점을 둔다. 물론 이에 테러와 마약, 이민업무는 물론 국가기반체계 보호, 자연 및 인위적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임무도 포함된다. FEMA는 1803년에 연원을 두고 있는 만큼 유구한 역사적 경험 축적 속에 재난관리체계의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세계 전략을 구사하는 측면에서의 거시적인 안보 개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모든 위기사태를 관장, 개입,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세계질서 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 하에서 각종 위기 문제를 접하고 있다. 국

7) 현대에 이르러 다양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빈발해지면서, 위기관리기관간 중복 및 혼선, 책임의 분산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그 대안으로 통합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8) 정지범, 앞의 책, 309-310면.

제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국지분쟁, 영토 갈등, 이념, 종교 분규, 마약 등 포괄적이고 전 지구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위기 개념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질서를 이끌어 가는 국가로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위기와 위협에 적극적 대처, 조정해 나가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sup>9)</sup>

## 나. 기구 및 현황

### 1) NSC- 전통적 국가안보

전통적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의거하고 있다. NSC는 위기관리를 위한 전략 개념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토의·결정 및 실행을 지도한다.

즉 NSC는 법적·제도적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대외정책 문제 등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고위직 고문들과 내각관료들과 함께 고려하는 주요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①정책협조, ②대통령에 대한 자문, ③정책의 합법화, ④위기관리 의사결정, ⑤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정보교류·의사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10)</sup>

### 2) DHS- 국내 안보위기관리

21세기의 복잡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방위적 기능 발휘가 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가 필요<sup>11)</sup>하게 되었다.

국토안보부는 국내 안보위기관리체계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9.11 테러

9)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27-29면.

10) 김열수,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서울 : 오름, 2004), 94-95면.

11) 정찬권, 21세기에 부합된 국가위기관리체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군사논단 제57호(2009), 64면.

직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목표로 관리체제를 개선·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아메리칸 인디안, 비정부기관들간의 표준화된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3년 국토안보부(DHS)를 신설하였다.<sup>12)</sup>

국토안보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인준하는데,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방장관이나 법무장관과 같은 지위로, 미국 내 재난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법당국과 정보기관, 기타 정부기관의 자료는 물론 미국의 인프라 및 기타 취약 대상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된다.<sup>13)</sup>

국토안보부의 주요 목표는 ①테러리스트들을 포함, 위험한 사람들로부터의 국가 보호, ②방사능/핵, 생화학 무기 등의 위험 요소들로부터 국가 보호, ③중요한 국가기반시설 등 국가인프라의 보호, ④국가의 대비태세 및 긴급사태 대응능력 강화, ⑤DHS 임무 및 관리의 통합과 강화 등이다.

국토안보부는 자체 모니터링, 각 기관의 보고 등을 토대로 상황 평가·대응 계획 수립·활동 조율 등을 담당한다. 실시간 감시·상황전파 등을 위해 24시간 상황실(HSOC:Homeland Security Operation Center)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해 복구 및 발전소 등 핵심기반시설 관련 대응 조율을 위해 특별조정센터(NRCC·NICC)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유관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해 웹기반 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WMD 관련 테러예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 참여하에 2년마다 TOP OFF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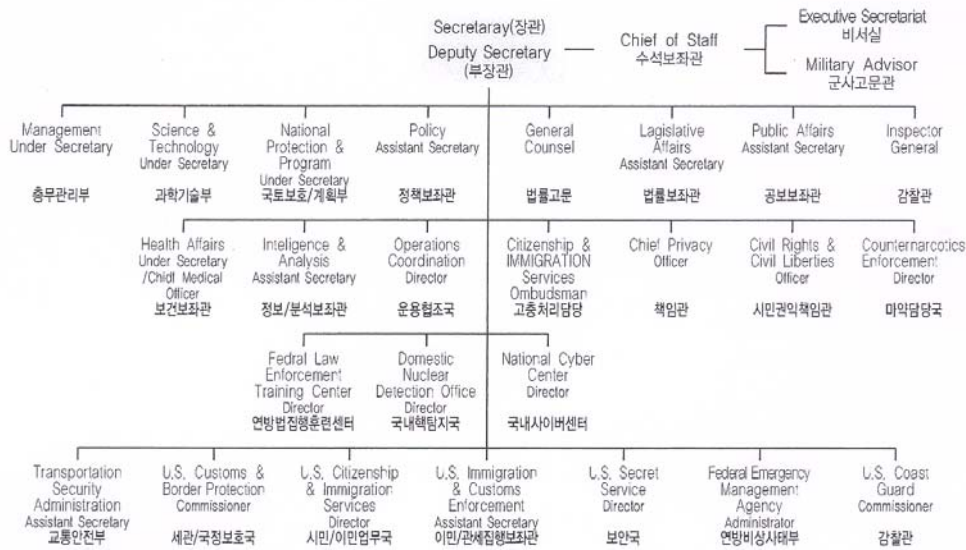
국토안보부는 통합된 국가위기관리체계를 형성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

12) 김열수, 앞의 책, 309면.

13) 김도승,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초점 제21권 17호 통권 470호(2009), 42면.

당된다. 이에는 교통안보, 관세 및 국경보호, 시민권 및 이민 활동, 정보부, 연방긴급 사태국, 해안경비대, 과학기술 보호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위협과 위험, 위기로부터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형성, 운영함으로써 대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인식하에 조직된 것이다. 국토안보부, 교통부 등 각 연방기관은 NRF 규정에 따라 소관 기능별로 주·지방정부 및 여타기관을 지원한다. 중앙통제의 성격이 강하며, 위로부터 문제의 해결에 나서는 경향이 강하다. 즉 국토안보부가 테러리즘과 자연재난, 기타 비상사태들로부터 직접 국가적인 대응을 선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방, 방호, 대응, 복구, 서비스 제공 등<sup>14)</sup> 일련의 대처 과정에 모두 개입해 일을 처리한다.<sup>15)</sup>

< 미국의 국토안보부 조직 > <sup>16)</sup>



14) 이러한 단계별 위기관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거의 동일함을 볼 수 있다.  
 15) 정지범, 앞의 책, 109면.  
 16) 미국 국토안보부, <http://www.dhs.gov/index.shtm>(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p.35. “재인용”).

### 3) FEMA- 재난관리,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

FEMA는 1803년 의회법안에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다. 이후 1930년대 재난에 대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왔으며,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는 연방재난 지원부에 의해 연방차원에서의 대응과 복구 작업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비상사태와 재난활동은 분산되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분산된 재난 관련 부처들을 FEMA로 통합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초기 FEMA는 어떻게 복합적인 위기관리를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많은 도전에 직면한 바 있다. 러브 운하 오염, 쿠바 난민 위기, 핵발전소 사건, 로마 프리에타 지진(1989년), 앤드류 허리케인(1992년) 등이 국가적 관심 대상이었다.

이후 FEMA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시민보호에서 재난 구호, 재건, 이민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영역을 확대시켜 나왔다. 9.11 테러 사건 이후에는 국가적 사전대비와 본토 방위, 비상사태의 실험 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으로 본토 방위가 새로운 임무로 떠오르게 되었다. 2003년 3월 FEMA는 22개의 연방기관과 결합되었으며 각종 프로그램과 인원들이 DHS로 흡수되었다.<sup>17)</sup>

2005년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 규모는 96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sup>18)</sup>

2006년 10월에 부시는 카트리나 이후 비상사태법안을 가결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FEMA가 재조직되어 현재에 이른다.<sup>19)</sup>

FEMA의 임무는 재난을 다루는 것이며, 재난은 경고 없이 갑작스레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매년 허리케인·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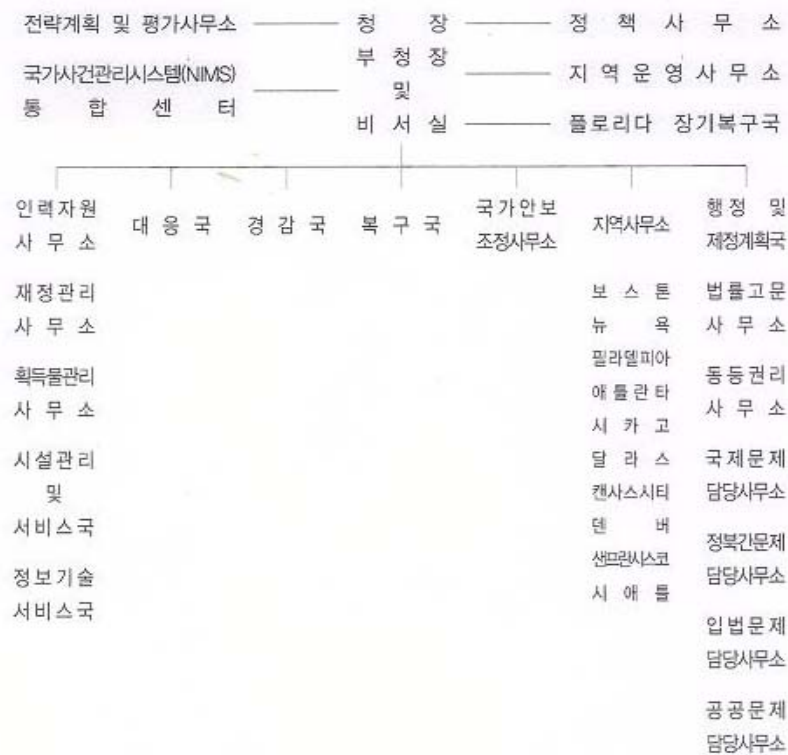
17)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35면.

18) 정지범, 앞의 책, 307면.

19)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37면.

토네이도·홍수·화재·테러 등 수백만의 각종 재난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FEMA의 주요 임무는 인명과 재산 손실을 줄이고 자연재해, 테러 행위, 여타 인재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다. FEMA에는 2,600여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4,000여명이 재난 구조를 위해 상시대기하고 있다. 또한 FEMA의 작업은 여타 국가위기관리체계와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중앙과 지방의 비상사태관리 기관을 비롯해 27개 연방기관과 미국적십자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sup>20)</sup>

< FEMA의 조직도 > 21)



20)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37면.

21) 행안부, 선진국가 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국외연수결과보고서(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36면, “재인용”).

## 다. 특징 및 시사점

첫째, 위기관리의 영역 구분이 명확하여 영역별 주관기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통적 안보, 국내, 재난 등 3개의 위기관리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각각 NSC, DHS, FEMA가 주관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둘째, 재난관리의 경우 각자의 임무와 역할,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상설기구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난대응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셋째, 국토안보부를 창설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DHS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위기관리체제를 통합해 운영하는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사례로 여타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22)</sup>

미국이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여 전시를 제외한 비전시 국토안보분야의 위기관리 총괄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2008년 행정안전부를 설치하여 비전시 재난 분야 위기관리 업무의 총괄기구 역할을 수행<sup>23)</sup>토록 하는 것은 위기관리 통합성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잘 완비되어 있다고 평가되며, 국가위기관리 기관들간 유기적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sup>24)</sup>

다섯째, FEMA는 자발적인 민간단체 운동의 성장, 강화를 통해 자발적인 조직들이 재난으로부터 준비·대응·회복하는 최적의 효율화를 위한 협의를 수행하며, 정기적 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관계 유지, 자발적 참가

22)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37-39면.

23) 안철현, 한국의 재난안전 거버넌스,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09, 3면.

24)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39면.

자와 재난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통해 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였다.<sup>25)</sup> 현대사회의 다양한 신종 위협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협정책과는 다른 형태의 위협정책 및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전문가, 시민간의 새로운 관계의 위협 거버넌스가 필요하다.<sup>26)</sup>

---

25) 김은성,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협 거버넌스, 한국정책학회, 2010, 132면.

26) 안혁근,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한국정책학회, 2010, 121면

## 2. 영국

### 가. 위기관리 배경

영국은 세계제국으로서 전세계에 걸친 식민지 건설 및 세계 경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제1, 2차 세계대전의 주도적 전승국으로 위기를 넘어 전쟁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9.11 테러 이후 대테러전의 수행에 앞장서 있으며, 알 카에다의 직접 공격 대상으로 부각되어 있는 상태이다. 2005년 7.7 런던 지하철 테러 사태 등을 겪은 바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위기에 대처하고 있다.<sup>27)</sup>

반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원칙은 초기대응을 포함한 중요한 책임은 지방 정부에 있다.<sup>28)</sup>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고, 그 종류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응책 역시 전방위적 위기관리 태세를 지향하고 이에 맞는 체계를 구비하려 하고 있다.<sup>29)</sup>

### 나. 기구 및 현황

영국의 전 부처는 위기상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지만, 내무부가 자연재해와 인적 재난에 대한 위협으로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위기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영국의 위기관리 조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는데, 중앙정부는 위기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 및 대규모 재해 발생에 대해 준비하고 대응한다.<sup>30)</sup>

---

27)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52-53면.

28) 김선빈, 앞의 글, 4면.

29)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53면.

30) 정지범, 앞의 책, 340면.

영국은 각종 긴급사태에 대응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4가지의 대비 형태를 갖추어 놓고 있다.

첫째는 긴급사태에 대한 복구 준비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비상사태와 재난에 대해 대비하는지를 알려준다.

둘째는 긴급사태 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고 국민적 신뢰 향상을 통해 비상사태로부터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부문이다.

셋째는 비상사태를 다루고 정부 내외의 유관조직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전문대학<sup>31)</sup>을 운영한다.

넷째는 국민에게 사전 경고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국가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영국의 정보 공동체(UK Intelligence Community), 정보 및 안보사무처(ISS), 정보 안보위원회 등의 국가정보 유관기관과도 연계되어 있다.<sup>32)</sup>

이중 가장 대표적인 기구는 2001년 7월 내각 산하에 설치된 민간비상대비사무처(CCS, Civil Contingencies Secretariat)이다. 여타 유관 정부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긴급사태에 준비·대응·복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설립 목적은 영국과 그 공동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비상사태에 대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며 이의 대응과 복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다.

① 위기를 조기 탐지해 문제 지역과 그 성격을 지적하며 사전 경고를

31) Emergency Planning College(Easingwold 소재)를 통해 정부, 민간분야 관련자들이 연간 6천 여명씩 훈련받는다.

32)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53-54면.

제공한다. ②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한다. 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각 공동단위체 조직들과의 유기적 연계 속에 진행한다. ③미래에 대한 보다 강화된 경계태세를 구축한다. ④일관성을 갖추며 탄력 있는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⑤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갖춘다.

이는 영국에서의 시민보호는 통상 비상관리 개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또한 통합비상관리는 예측 및 평가, 예방, 준비, 대응, 복구 등의 6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sup>33)</sup>

CCS는 정부의 목표를 전달하고 정의하는 등 총리를 지원하는 한편, 내각이 부처간 협력 및 일관되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민봉사를 강화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재난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중앙위기관리위원회(COBR, Cabinet Office Briefing Room)가 핵심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 수준에서 내각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책위원회인 COBR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역위기관리 위원회 및 전략적 조정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있다.<sup>34)</sup>

위기관리계획은 중앙정부 지도하에 민관합동 조직인 지역별 위기관리 포럼(RRF : Regional Resilience Forum)에서 수립, 일상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군, 재난관리본부, 수도·전기·교통 등의 기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재난 및 사고대응과 수습에 있어서는 지역마다 구성된 일종의 사고대책본부인 전략적 조정그룹(SCG)이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sup>35)</sup>

33) 장규식, 외국의 비상대비제도, 비상대비연구논총, 통권 제34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54-55면, “제인용”).

34)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55면.

35) 행정자치부,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07, 137-138면.

책임자는 지역 경찰청장이며, 정부부처, 군, 경찰, 소방대, 병원, 민간지역위원회로 구성되어 중앙정부 파견의 공무원들도 지역 책임자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지역의 현장성과 분권화된 책임과 권한 구조가 이뤄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별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체제가 잘 작동되고 있다.<sup>36)</sup>

#### 다. 특징 및 시사점

첫째, 현장 및 즉시 대응을 강조하면서 지역 중심의 분권화를 통해 사고 대응의 신속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분권적 구조를 통해 위기 대응의 신속성과 현장성을 제고하고 있다.<sup>37)</sup>

런던의 경우 지방 정부 차원에서 민·관을 아우르는 위기대응 기관들이 참여하는 위기극복 포럼(RRF)에서 전략적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정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전략적 조정그룹(SCG)를 비롯한 통제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 위기관리 조직의 경우, 국가적 재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계가 원활히 작동되어 위기관리가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장 대응 측면의 또 다른 특징이다.<sup>38)</sup>

둘째, 사후수습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장기간에 걸쳐 제공함으로써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제고하고 있다.

셋째, 언론이 위기관리의 협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36)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56면.

37)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56면.

38) 김선빈, 영국에서 배우는 위기관리, 삼성경제연구소, 2005, 1면.

공동체 유지라는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는 영국 언론과 이들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언론이 위기관리의 협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39)</sup>

영국은 사고나 재난 보도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이 형성되어 있다.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보 제공 등 위기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축으로서 언론이 기능을 하고 있으며, 공익과 인권을 최우선시하며 재난 현장에 대해 자극적인 묘사를 회피하고 있다. 재난(위기) 전문 기자체가 정착된 결과 전문적이고 치밀한 해석을 포함한 심층보도를 통해 재난 피해를 축소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sup>40)</sup>

---

39) 김선빈, 앞의 글, 1면.

40) 김선빈, 위의 글, 9-10면.

### 3. 일본

#### 가. 위기관리 배경

일본은 지리적으로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다. 단적인 예로 일본의 재해 발생 비율을 분석해보면, 진도 6.0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는 187회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905회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활화산의 경우 전 세계에 분포된 1,548개 중 7.0%인 108개가 일본 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각종 재해·재난에 의한 피해 사망자 및 피해액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sup>41)</sup>

이러한 자연 환경하에서 일본 국민들은 매뉴얼의 축적 및 관리를 비롯해 이의 운영 능력에 탁월성을 보여 왔다. 일본은 전통적 안보영역과 관련해 2차 대전 이후 미·일 동맹에 의존해 왔다. 위기관리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 모색에는 소홀한 경향을 보여 왔다. 최근에는 특히 1995년 고베 지진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의 재난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내각 차원에서 이를 다뤄나가는 등 새로운 대처방안과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북한이 1998년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2006년 미사일 발사 및 핵무기 실험이 이뤄지자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이의 대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위기의 종류를 ①주변국으로부터 파생되는 직접적인 안보위협 ②국내에 테러단체들에 의한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위협 ③자연 및 인위적 재난에 따른 위기 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반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41) 정지범, 앞의 책, 340면.

대비는 ①안전보장회의 ②내각부의 방재담당조직 등 크게 2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장회의는 북핵, 미사일 위기, 괴선박 침투 등 전통적 안보위협과 외교, 경제, 에너지, 식량 등 군사 외적 위협요인들을 총체적으로 담당한다. 내각부 방재담당조직은 태풍, 지진, 해일,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난과 원자력 사고, 대형화재 등 인위적 재난을 담당하고 있다.<sup>42)</sup>

## 나. 기구 및 현황

### 1) 안전보장회의

일본은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국가안보 의사결정체계를 정비해 나왔다. 어전회의,大本영, 연락회의 등 전쟁지도기구와 접맥되어 나왔다. 물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패망과 더불어 사라졌다. 전후인 1956년에 총리의 자문기관으로 국방회의가 설치되었다. 군사를 정치에 종속시키는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되었다. 즉 군령권은 내각의 총리에 귀속되었고 방위와 관련된 의사결정도 내각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 포괄적 안보의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자, 새로운 위기관리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국방회의를 개편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운영하였다.<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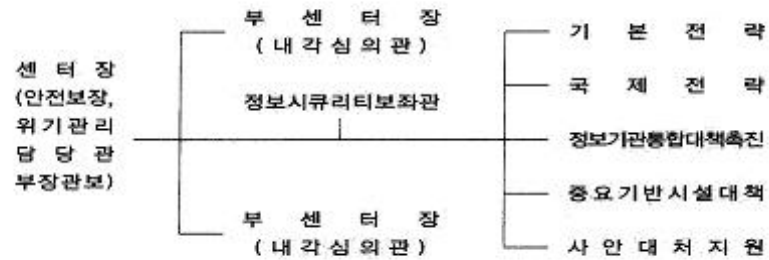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볼때, 일본의 안보위기관리체계의 핵심은 내각총리와 내각관방장관이다. 내각총리와 내각관방장관이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체계이다. 내각총리는 각종 안보관련 간담회·회의를 개최, 자문 및 결정을 내린다. 즉 안전보장회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대정보활동 추진회의 등을 핵심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42)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40-41면.

43)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41-42면.

아울러 관방장관은 사태대처전문위원회(안전보장설치법, 제8조), 내각정보실, 정보시큐리티센터(대정보활동센터), 국민대화, 추진회의 등을 관장하고 있다. 이 밖에 국제조직범죄 및 국제테러 대책추진본부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내각 관방은 내각의 보조기관인 동시에 내각의 수장인 내각 총리대신을 직접 보좌·지원하는 기관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각의 서무, 내각의 중요정책의 기획 입안·종합 조정, 정보의 수집·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sup>44)</sup>

< 내각 관방 정보안전센터 조직체계 ><sup>45)</sup>



## 2) 내각부 방재담당 조직

일본은 1995년 한신·아와이 대지진 이후 국가, 지방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통일된 정책, 제도와 사업 추진을 목표로, 내각의 위기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내각위기관리가(특별직)’을 신설하였다.<sup>46)</sup>

특히 2001년 중앙부처를 통합하면서 방재업무를 신설된 내각부가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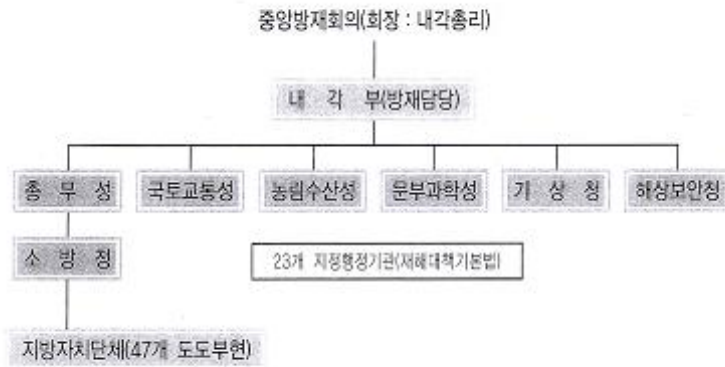
44)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43-44면.

45) 내각 관방 정보안전센터, [www.nisc.go.jp/index.html](http://www.nisc.go.jp/index.html)(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44면, “재인용”).

46) 정지범, 앞의 책, 289면.

괄적으로 맡게 되었다.<sup>47)</sup>

< 일본의 방재조직 개념도 ><sup>48)</sup>



내각부의 재난방지 관련 조직들은 ①중앙방재회의, ②내각부방재담당, ③지정 행정기관(23개) ④지정 지방행정기관 ⑤지정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와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주민들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총괄적인 재해 대책과 더불어 내각부 방재담당정책총괄관이 통합 조정권을 갖고 주도해 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다.

중앙방재회의는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회의의 하나로서 내각총리대신을 필두로 전 각료, 지정 공공기관의 대표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방재 기본계획의 작성 및 방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sup>49)</sup>

중앙방재회의의 역할은 ①방재 기본계획 및 지진방재 계획의 작성 및

47)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46면.

48) 박해정, 일본의 방재조직과 방재정책, [www.nema.go.kr](http://www.nema.go.kr), (안보전략연구소, 바람직한 국가위기관리체계, 47면. “재인용”).

49)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47-48면.

그 실시의 추진 ②비상 재해 때의 긴급조치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의 추진 ③내각총리대신·방재담당 대신의 자문에 따른 방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방재의 기본방침, 방재에 관한 시책의 종합 조정, 재해 긴급 사태의 포고 등) 등 ④방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해 내각총리대신 및 방재담당 대신에의 의견 진언 등이다.<sup>50)</sup>

대국민 상황전파는 중앙정부, 지자체간 긴급 연락용 컴퓨터망인 Em-Net, 인공위성과 전국의 무선경보장비, 방송사를 연결한 ‘전국동시 경보시스템’ (J-Alert) 등을 활용한다.<sup>51)</sup>

### 3) 방재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일본 정부는 방재기관들이 필수적으로 공유해야 할 정보 형식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부, 지방 공공단체의 각 기관과 국민들의 정보를 DB화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 ‘방재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방재정보 공유 플랫폼’은 재해로 인한 피해 추계 정보, 기상 정보 등을 DB화하여 재해 현장에서 재해 정보와 각 기관의 활동 정보를 동일한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방재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 공유는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재해에 대한 방재능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만큼, 일본 정부는 ‘방재정보 공유 플랫폼’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sup>52)</sup>

## 다. 특징 및 시사점

첫째, 내각 총리와 내각 관방장관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이원적·유기적 대처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 현장에서부터 중

50)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48면.

51)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48면.

52) 정지범, 앞의 책, 296면.

양정부의 대처에 있어 유기적 기능 조직을 정비하고 있으며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sup>53)</sup>

둘째, 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보와 위기관리의 핵심기구로 자리매김하고 그 역할 및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안전보장회의는 국방과 중대한 긴급사태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자문기구 보다는 정책결정기구의 성격이 강하다.<sup>54)</sup>

셋째, 일본 정부는 재해로 인한 피해 감소와 국민 안전의 확보를 위해 행정에 의한 공조 뿐만 아니라 국민 개인과 기업들의 ‘자조’와 지역과 다양한 주체에 의한 ‘공조’의 제휴에 중점을 두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스스로의 지역은 스스로 지키자’라는 목표 의식 아래 민간 조직인 ‘자주방재조직’을 결성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방재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1995년 「재해대책기본법」상에 ‘방재 자원봉사 활동의 환경 정비’와 ‘자원봉사의 수용’에 관한 항목을 신설<sup>55)</sup>하는 등 국민에 의한 방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신, 아와지 대지진시 자주 방재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은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 민간방재활동이 주목을 받았다.<sup>56)</sup>

넷째, 위기관리 기구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대국민 홍보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훈련과 평시 대비체계가 상당히 잘 구비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57)</sup>

53)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50면.

54)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50면.

55) 징지법, 앞의 책, 303-304면.

56) 안혁근,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한국정책학회, 2010, 121면

57)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51면.

## Ⅲ. 주변 국가 위기관리 체계

### 1. 러시아

#### 가. 위기관리의 배경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체첸공화국 분리·독립운동 등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극심한 위기를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직접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으며, 구소련의 붕괴는 체제위기 그 자체였고, 그 여파로 보수 군사쿠데타, 의회의사당 유혈사태 등을 겪었다.<sup>58)</sup>

엘친정부는 이미 구소련 붕괴 이후 구소련 국가정보기관인 KGB를 연방 보안부(FSB)와 해외정보부(SVR)로 분리 개편하였고, 전통적 안보문제를 다룬 국가안보회의를 설치·운영하였다. 국가안보회의는 1992년 3월 국가안전보장법에 기초해 설립되었으나, 1996년 국방회의로 일부 개편되었고, 이어 1998년 국가안보회의로 다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른다. 또한 정부부처에 재해재난을 전담하는 비상사태부(EMERCOM)를 만들어 각종 위기상태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푸틴 정부 체제하에서 러시아는 강력한 중앙 집권화된 권력구조로 변모되었으며,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sup>59)</sup>

#### 나. 기구 및 현황

58)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58면.

59)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58면.

## 1) 국가안보회의

러시아의 위기관리체계는 군사와 국방 분야를 포함한 안보체계와 연계되어 있다. 즉 전통적 군사 안보부문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안보회의에서 다룬다. 러시아의 군사독트린의 제정, 정보독트린 및 국가안보개념 문서의 채택 등 군사안보 부문의 국가적 기본 지침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명실상부한 안보문의 최고 결정 기구이다.<sup>60)</sup>

## 2) 비상사태부

러시아 국가재난 관리체계는 정부, 비정부 및 시민단체와 군 조직간의 모든 관계를 규정한다. 모든 행정기관은 해당 분야에서 비상사태시 취해야 할 비상대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비상 대비계획에 통합되어 있다.<sup>61)</sup>

비상사태시 비상관리 업무활동을 주도하는 기관이 바로 비상사태부이다. 외교부, 국방부와 더불어 비상사태부는 대통령의 직접 관할하에 있는 핵심 안보부처 중의 하나이다. 비상사태부는 러시아 전역에 걸쳐 9개 지역 센터를 두고 있다.

특히 비상사태부령에 근거해 국가위기상황통제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수단의 도입 준비, 긴급 상황 예보·억제조치 이행 보장, 예보 및 既발생한 긴급상황에 대한 대국민 전파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위기상황통제센터의 위기대응체제하에서 각 해당 국가기관간에 정보 공유 역시 이뤄지고 있다.<sup>62)</sup>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민방공, 재해, 재난 복구에 관한 정부 시책 수립

---

60)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58-59면.

61) 장규식, 외국의 비상대비제도, 354면.

62)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59-60면.

및 시행, 비상사태 관련 정부의 주요정책 수행 및 주무역할, 재난관리체계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임무 수행, 민방위 및 구조업무 총괄 지휘, 대규모 사건, 재난 및 비상사태 진전을 위한 작전 감독, 방사능 물질 오염 사고시 연방정부, 지방정부, 관련 기관 및 업체와 협조 등 역할을 수행한다.<sup>63)</sup>

위기상황 발생시 보고 및 전파체계는 비상사태부·정보기술통신부·문화언로매체부의 대국민 전파체계에 대한 승인관련 명령에 기초하여 실행된다. 대국민 전파는 TV·라디오 등 방송통신망을 이용하고 방송은 각 5분, 3회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sup>64)</sup>

#### 다. 특징 및 시사점

첫째, 러시아는 전통적 안보위기와 민방위, 재난관리를 유형별·기능별로 통합해 효율적 대처를 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즉 전통적 국가안보에 대한 기본지침과 정책대강은 국가안보회의에서 맡고 있으며, 총괄적인 국가재난위기 대처는 비상사태부를 두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상사태부는 내각 부서중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는 행정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둘째,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역단위의 수준 등 5개 수준별로 조정기구와 역할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강한 조정력과 권한을 행사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셋째, 비상사태부의 경우,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장관이 장기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넷째, 군과의 협력체제도 비교적 잘되어 있다. 이에 기초해 러시아의

63) 김열수,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 170면.

64)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60-61면.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은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대응 성격이 강하다.

다섯째, 러시아는 분리-독립운동이 아직 내부에 일어나고 있고 잦은 테러 발생, 국경 관리의 어려움, 핵과 생화학 대응 등 크고 작은 전방위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대응 양태 역시 신속하지만 강경하고 물리적 대응에 치중하는 경향을 노정하는 한계도 지니고 있어 효율성과 합리적·민주적 제도 운영과의 괴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sup>65)</sup>

---

65)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61-62면.

## 2. 중국

### 가. 위기관리의 배경

중국은 2003년 SARS 발병 이후 범국가적 대응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법규 등을 마련하였다. 국가차원의 위기 대응활동의 체계와 절차 등을 규정한 도발사건대응법(挑發對應法)(2007.11)을 제정하였고, 국가차원의 대응매뉴얼과 80개 중앙부처, 31개 지방 省별 매뉴얼도 준비하였다.<sup>66)</sup>

### 나. 기구 및 현황

업무총괄은 총리 지도하에 평시에는 국무원 상무회의가, 위기상황 발생시에는 위기대응 지휘기구가 담당한다. 실질적 업무는 국무원내 “응급관리관공실” 및 해당 중앙 행정기구 및 지방정부가 수행한다. 중국은 위기 유형을 자연재해, 사고, 공공위생, 사회안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안의 파장정도와 긴급성 정도 등에 따라 ①일반 → ②비교적 중대 → ③重大 → ④특별 重大 의 4단계로 위기 상황을 구별하고 있다.<sup>67)</sup>

중국의 단계별 위기 상황 대응은 한국의 관심, 주의, 경계, 심각한 4단계 위기관리 단계별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특별중대, 중대 사안시 현장 책임자는 省級 지방정부를 통해 사건 발생 4시간내 국무원 응급관리관공관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인지 후 2시간 내 보고한다. 省級 지방정부는 관련 내용을 국무원에 보고함과 동시에 여타 지역정부, 기관, 언

66)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82면.

67)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82-83면.

론, 인터넷 등을 통해 전파한다. 2008년 5월 사천성 대지진사태 당시 국무원 응급관리관공실은 위기 대응 중추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68)</sup>

---

68)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83면.

## IV. 특수상황국가 위기관리 체계

### 1. 이스라엘

#### 가. 위기관리의 배경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슬람권 국가들과 종교적·인종적 대립으로 전쟁을 겪은 바 있다. 1948년 제1차 중동 전쟁인 독립전쟁을 비롯해 1956년 시나이전쟁(2차 중동 전쟁), 1967년 6일 전쟁(3차 중동 전쟁), 1973년 욘키퍼 전쟁(4차 중동 전쟁) 그리고 1982년 제5차 중동 전쟁을 치른 바 있다. 2009년 현재에도 제6차 중동 전쟁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치 상황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상시 전시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준립과 연계된 사활적 위기를 일상생활 속에 인식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대내외적 위기상황이 상시화되어 있다. 따라서 전쟁에 대비한 위기관리체계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여타 국가와 다른 특수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테러조직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팔레스타인과의 대립과 협력 조정은 중동평화와 전쟁의 핵심을 이룬다.<sup>69)</sup>

#### 나. 기구 및 현황

특수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민·군을 포함한 전국가적 위기

69)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62면.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총리실 직속으로 ①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설치 및 운영 ②부총리급의 국방부를 비롯해 총참모부 산하 민방위사령부의 운영, ③세계 최고수준의 정보기관 운영(모사드) ④ 내각의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설치 운영 등을 꼽을 수 있다. 민군을 통합적·총체적으로 관리해 다루되 영역별로 기능적 분화도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전평시의 구별이 없다는 점도 특기할 사항이다.<sup>70)</sup>

## 다. 특징 및 시사점

첫째, 주변국과의 갈등과 전쟁 및 치안불안이 높다는 측면에서 국가 생존 위기와 같이 급박한 위기와 위기의 일상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와 대응 측면도 전시와 평시를 나누지 않는다. 항시 전시에 준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둘째, 전통적 위기관리의 경우, 총리 직속으로 있는 안전보장회의가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NSC는 총리 및 정부기관 부처를 지원할 뿐 아니라, 주요 안보안건에 대한 통합·조정 권한까지 부여받고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애국심과 충성심, 위기관리 대비 태세에 대한 준비와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며, 위기에 대한 인식 역시 높다. 대국민 위기관리 교육과 총체적 대비태세가 비교적 잘되어 있다.

넷째, 이스라엘의 사례를 원용할 경우, 이스라엘이 처한 안보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군이 하나의 위기관리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점과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총리를 최고 책임자로 하는 전통적 위기관리의 최고정책 결정기구로 국가안보회의를 운영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71)</sup>

70)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63면.

71)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67면.

## 2. 대만

### 가. 위기관리의 배경

대만은 현재 중국과 견주어 분단국가이자 비대칭 군사력의 안보환경을 접하고 있다. 대만의 위기는 중국과 대립 내지 갈등 관계에서 오는 군사적 위협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기구로는 총통의 직속하에 있는 국가안보회의가 있으며, 행정원에 속해 있는 국방부와 내정부(內政部)를 꼽을 수 있다. 물론 전통적 안보분야는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재난을 포함한 제반 위기관리는 내정부에서 총괄해서 담당한다. 내정부의 권한과 위상 역할과 임무 영역이 매우 넓고 크다.<sup>72)</sup>

### 나. 기구 및 현황

대만의 국가위기관리체계는 국방·군사 부문과 재난·대내 치안이 연계된 부문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는 국방부가, 후자의 경우는 내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과 연계된 회의체로 국가안보회의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총통은 대외관계와 국가기능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며 군총사령관으로서 안보 문제 역시 책임을 지는 최고 정책 결정자이다. 총통은 행정원의 결정에 의해 긴급사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국가안보와 국민에 영향을 미칠 긴급한 위협에 의해 대처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73)</sup>

국방부는 군사안보 부문을 책임지며 행정원의 한 부서로 되어 있다.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고, 아시아 태평양 섬 열도

72)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68면.

73)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68면.

의 중심에 위치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중국과 마주하고 있으며 합병의 가능성을 포함해 군사적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다.<sup>74)</sup>

대만의 행정원은 내정부(內政府)를 비롯해 모두 39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내정부는 실질적으로 재난을 비롯해 대내문제의 위기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이다. 내정부는 국내문제에 책임을 지며 지방 관리들에 대한 명령권과 각종 훈련실시 권한을 갖고 있다. 대내 치안문제를 담당하는 것도 포함된다. 환경보호, 사회정의, 사회평화와 질서, 재난방지, 지역개발, 경찰 임무 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내정부의 조직은 9개의 국과 1개의 사무, 4개의 위원회, 1개의 센터, 9개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기관으로는 국가경찰국, 국가소방국, 국가징수국, 중앙경찰대학 등이 있다.<sup>75)</sup>

#### 다. 특징 및 시사점

첫째, 중국과의 분단 상황에서 오는 위기의 인식이 높다. 총통의 위기 대처 기능과 권한이 크다.

둘째, 행정원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내정부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내정부는 재난과 치안과 연계된 거의 모든 부문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실질적인 핵심권력 부서라 볼 수 있다. 위기발생시 軍과 민간 부문간 협조 강화를 위해 軍 민사부서와 지방정부 대표간 협조기구로서 民事協調會報를 운영하는 등 군·민의 위기대응 체계가 명확하며 일관성과 총체성을 발휘하도록 편제되어 있다.

셋째, 국가방위법, 행정원 재해방지 구조법 등 국가안보와 연계된 법

74)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69면.

75)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71면.

령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에 대한 권한이 커서 중앙집권화된 정책결정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일사분란한 지휘-명령체계를 갖추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sup>76)</sup>

---

76)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74면.

## V. 외국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 1. 종합적 평가

첫째, 전반적인 추세는 전통적 안보영역, 국가 핵심기반시설 보호, 재난 재해 방지 등의 세가지의 영역 구분이 이뤄진 상태에서 제도적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즉 전통적인 군사 안보는 기존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다양한 위협으로부터의 안전과 비상사태 부문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서를 창설해 정비하는 추세가 강하다. 미국의 전통적 안보 담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내 위기 상황은 국토안보부(DHS), 재난은 연방재난관리청(FEMA)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미국형 위기관리체계가 전세계 위기관리체계정비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둘째, 국가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대응양식과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SC, DHS, FEMA의 3개 기관으로 집중 통합관리를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sup>77)</sup> 반면, 영국의 경우는 현장대응 측면에서 지역 중심의 분권화를 통해 사고 대응의 신속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sup>78)</sup> 일본의 경우 ‘자기 지역의 재해는 스스로 대처한다’는 자치적 해결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으며 매뉴얼에 따른 사항식 요청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민군 합동대처와 전시대비의 성격을 띤 대비책 강구가 우선시되어 있다.<sup>79)</sup> 국가별로 위기관리에 처한 환경과 대처 경험, 문화적 특징, 인시 정도 등의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대처 양식도 다르게 나타난다. 위기관리는 일반성과 보편

77)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85-86면.

78) 김선빈, 앞의 글, 1면.

79)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85-86면.

성에 기초하면서도 자기나라 나름대로의 개별적 특성을 잘 조화롭게 적용시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임을 시사한다.<sup>80)</sup>

**셋째, 국가 및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해 나타난 결과이다. 예측불가의 대형 국제테러 빈발, 재난의 대형화 및 빈번화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능력만으로는 대처에 한계를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국가들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그간 분산되어 있던 긴급사태 관리기구들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의 성격에 따라 역사적 경험과 전통에 따라 분권화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노력도 존재한다. 사건대처의 현장성과 신속성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각 나라별로 그 특성과 문화,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되, 자신만의 특성 있는 위기관리 체계의 구축이 더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sup>81)</sup>

영국은 지역 중심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지방 정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분권적 구조로서, 위기관리 계획 수립 및 사고 대응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자는 지방정부이며, 이러한 분권적 구조는 위기 대응의 신속성과 현장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도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국가 차원의 가이드 라인 설정과 지역간 협력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sup>82)</sup>

**넷째, 위기관리체계 정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모든 국가는 나라별로 역사적 환경, 사회적 배경, 문화, 철학적 인식, 대외적 환경, 대내적 환경

80)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86면.

81)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87면.

82) 김선빈, 앞의 글, 1면.

등에 따라 다르게 정비하고 있다. 이에는 대외적 국가목표와 세계전략, 지역전략과의 연계측면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대내 정치적 목적과의 연계성도 담겨져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지정학, 풍토학과의 연계 및 법적·제도적 완비 능력과 그간의 위기관리 경험의 노하우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sup>83)</sup>

## 2. 국가별 비교

### 가. 별도의 위기상황 관리 기구 운영 여부

국방 등 전통적 안보 위협은 모든 국가의 국방 관련 부처가 전담하는 한편, 재난, 재해, 테러 등에 대한 대응체제는 국가별로 서로 다르다. 미국은 국토안보부(DHS), 일본은 내각위기관리센터에서, 영국은 민간비상사태사무국에서 담당하는 등, 다수 국가들이 국가위기상황을 예방·대응하는 임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sup>84)</sup>

### 나. 정부 내 보고 및 대국민정보전파 체계

주요국 대부분은 국민 참여를 위한 핫라인(hot-line)을 운영중이며, 주무기관이 관련 정보를 취합, 대통령·총리 등 최종 결정권자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정부내 정보전파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중인 국가가 많지 않으며, 유관부처 회의 개최 또는 상부지침 하달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미국은 주무기관이 주요 민간시설과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실시간 웹(Web)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싱가포르 등 소수 국가만이 유관부서 홈페이지 내용 게재·방송

83)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88면.

84)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88면.

매체 외에 對국민 전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sup>85)</sup>

영국은 언론이 위기관리를 위한 협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고나 재난 보도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이 형성되어 있으며,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보 제공 등 위기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축으로서 언론이 기능하고 있다. 재난 현장에 대한 자극적인 묘사를 회피하는 한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86)</sup>

## 다. 정부 차원의 예방과 대응 활동

사전 예방 관련 실제 활동은 분야별 실무부처가 실시하더라도 주무기관들이 대응 계획을 수립, 예방 활동 조율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테면 미국은 연방기관의 기능별 긴급지원 계획을 표준화한 국가비상시대비계획(NRF)을 시행중이며, 중국도 지방정부 및 중앙 각급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부정기적으로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sup>87)</sup>

## 라. 정부 민간 협조 체계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제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만 사태 발생시 민간과의 협조·관련자 훈련·자원봉사자 조직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중이다. 위기 상황시 미국은 민간부문 既지정 주요 인사와 협의를 실시하며 臺灣은 군·지방정부간 ‘민사협조회보’ 라는 협조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英國의 경우 위기대응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年 6천여명의 정부, 민간관련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sup>88)</sup>

85)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89면.

86) 김선빈, 앞의 글, 9-10면

87)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89면.

88)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위의 책, 90면.

## VI. 정책제언

### 1. 신속한 정보 소통(전파·공유)

위기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해법은 신속한 정보의 소통이라고 보여진다. 재해 발생시 어떤 한 기관만이 정보를 인지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공유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된다.

33가지 국가위기유형별로 주관 기관과 유관 기관간에는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의 고위 관리자간의 의사소통 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급 사이에서 실질적이고 즉시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 소통, 정보 공유를 위해 既 마련된 매뉴얼상에 적시된 유관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이 정기적인 훈련과 회의를 통해 발생 사건의 정보에 대해 신속한 전달과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매뉴얼에 따른 모의 훈련

위기 상황 발생시 효과적 대처를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매뉴얼로 정리, 매뉴얼에 따른 반복된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여 할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발생한 각종 대형 사건 사고들을 종합하여 만든 예상 시나리오를 토대로 여러 해당 정부기관들과 민간 참여자들 간의 시뮬레이션 훈련이나 Role-Playing 등의 사건 대응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훈련은 꼭 도심 현장에서 대규모로 이뤄질

필요는 없을 것이며, 매뉴얼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문제점을 보완하고 타 기관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실제 상황 발생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문제점들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한국형 위기관리 체계 구축

위기관리체계 정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특성과 효율성, 경험,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적 특성에 맞는 국가위기관리 모델을 창출해 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위기관리 조직의 태생적 특성을 감안하고, 정치문화, 행정문화적 특성인 위기 인식과 문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현실성, 효과성, 실현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sup>89)</sup>

세계적 추세인 통합적 위기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한편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분권적인 한국적 조직 특성 및 위기에 대한 각 기관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모든 국가는 나라별로 역사적 환경, 사회적 배경, 문화, 철학적 인식, 대외적 환경, 대내적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정비하고 있다. 이에는 대외적 국가목표와 세계전략, 지역전략과의 연계측면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대내 정치적 목적과의 연계성도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도 지정학, 풍토학과의 연계 및 법적·제도적 완비 능력과 그간의 위기관리 경험의 노하우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89)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앞의 책, 117면.

## 4. 민간인 참여 활성화(거버넌스)

국가위기관리분야에 있어서 시민 참여 확산을 유도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위기관리에 대한 올바른 국민들의 인식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위기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과 시민 사회는 서로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라는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시민단체 등을 소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을 국가정책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시민 사회간 상호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연락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위기관리분야에 자발적으로 희생한 시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바람직한 국가위기 관리체계, 2009.
- 정지범 외, 국가종합위기관리론, 법문사, 2009.
- 류재혁·윤성철·김용민, 경찰위기관리론, 경찰대학, 2010.
- 채경석, 위기관리정책론, 대왕사, 2007.
- 김열수,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 오름, 2004.
- 김선빈 외 3명, 영국에서 배우는 위기관리, 삼성경제연구소, 2005.

### < 논문 >

- 박동균, 한국 경찰의 위기관리능력 제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호.
- 서재호, 법치주의와 국가 위기관리의 법정책,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
- 정찬권, 21세기에 부합된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군사논단 제57호, 2009.
- 이덕로, 오성호, 정원영, 국가위기관리능력 제고에 관한 고찰, 한국정책과학 학회보 제13권 제2호.
- 안혁근,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국 정책학회 하계대회 및 국제학술회의, 2010.
- 김은성,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 거버넌스, 한국정책학회 하계대회 및 국제학술회의, 2010.
- 정주용, 이철주, 책임성의 분산과 위기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정부학 연구 제16권 제1호, 2010.

책임연구보고서 2010-29

## 안전사회 정착을 위한 세계 각국의 위기관리 체계

---

201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영 식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